

공 개



의안번호	제 13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3. 31. (제 6 차)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3. 31.

1. 의결주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5일 공포, 4.6일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양정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직권재심 근거 신설 (안 제40조)

과징금 부과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법원의 벌금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금융위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 가능

나.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안 별표 2)

- 1)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주문금액에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을 감안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
- 2) 유상증자 계획 이후 공매도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금액은 부당이득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

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안 별표 2의2)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령상 기준금액에 위반행위 동기 및 결과를 감안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출

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안 별표 3)

고의로 불법공매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중대한 위반인 경우는 수사기관에 통보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1. 2. 25. ~ 3.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별 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9조의2”를 “제429조의2, 제429조의3”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를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으로 한다.

제4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2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통해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별표 2 제1호 중 “제429조의2”를 “제429조의2, 제42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법 제429조의2”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법 제180조를 위반한 자가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로서 주체·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일자 등이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과징금의 한도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법상 한도를 적용한다.

- 자. 법 제180조의4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주체·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 등이 다른 경우, 각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과징금의 한도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법상 한도를 적용한다.

별표 2 제3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 (1) 기준금액은 법 제180조를 위반한 구매도 주문금액으로 한다.
-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아. 법 제429조의3 제2항의 경우

- (1) 기준금액은 법 제180조의4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이나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간주한다.
-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제4호가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div>위반행위의 중요도</div> <div>감안사유</div>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60	100분의 40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0

(6) 법 제429조의3 제2항의 경우

<div>위반행위의 중요도</div> <div>감안사유</div>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50	100분의 125	100분의 100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125	100분의 100	100분의 75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75	100분의 50

별표 2 제4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29조의3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구분 \ 중요도 ^{주1)}	상	중	하
법 제180조 ^{주1)}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미만 1%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이상 5억원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미만
법 제180조의4 ^{주1)}	공매도 주문금액 10억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 10억 미만 1억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 1억 미만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주2)} 100% 이상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20% 이상 100% 미만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변동폭 20% 미만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을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

주2) 주가변동폭은 해당 종목 주식의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서 공매도 주문 전 일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공매도 주문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

별표 2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또는 위법한 공매도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위반 또는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이거나, 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
하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부도발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 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단순투자목적의 주식취득의 경우*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 5%보고 위반의 경우에 한함

**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 한함

별표 2 제6호가목 중 “법 제429조의2”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로 하고, “경우”를 “ 경우(다만,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표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429조의2”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으로 하며, 같은 표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429조의2”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중 “· 제36호· 제37호· 제38호· 제39호· 제39의2호· 제39의3호· 제39의4호”를 “· 제36호· 제37호· 제38호· 제39의2호· 제39의3호· 제39의4호· 제39의5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법 제449조제1항제39호부터 제39호의4까지”를 “법 제449조제1항제39호의2부터 제39호의5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2)(나) a 중 “공정한 가격 형성(호가의 형성 포함),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나) c 본문 중 “가격 형성(호가의 형성 포함) 및 거래량 등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c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2)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판단기준

결과 \ 동기	고의	중과실*		과실**
		공시위반	보고의무위반	
사회적물이야기	A	C	D	D
중 대	B	C	D	D
경 미	D	D	D	E

* 공시위반 또는 임원보고의무위반에 한한다.
 ** 불공정거래의 경우(위법한 구매도 제외) 중과실을 포함한다.

(1)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결과 \ 동기	고의		과실(중과실)	
	조사* 적발	자진** 보고	조사* 적발	자진** 보고
사회적물이야기	A	B	C	C
중 대	B	C	C	C
경 미	D	D	D	E

* 지분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과정을 통해 보고의무위반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 지분보고를 하였으나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2)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결과 \ 동기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이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3 제3호 A 및 B의 조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A(고발) 또는 B(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또한,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C(과징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필요시 A(고발) 또는 B(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별표 3 제3호 비고의 조치기준란 제1항 본문 중 “부정거래행위”를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용 및 부정거래행위”를 “이용,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제8항, 제429조, <u>제429조의2</u> , 제430조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증선위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 429조의2, 제429조의3 ----- ----- ----- ----- ----- ----- ----- ----- ----- ----- ----- ----- ----- ----- -----.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u>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u> 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 ----- <u>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u> ----- ----- ----- ----- -----.

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
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
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

② ~ ④ (생략)

제40조(직권재심)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illegible]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직권재심)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2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통해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55